

시론

지우고 싶은, 그러나 꼭 새겨야 할 2024년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과연일까. 2024년 대한민국은 천지창조 이전과 같은 혼돈(chaos)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서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었다. 급기야 그 화룡점정은 2024년 12월 31일 밤 10시23분에 찍혀졌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이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이유로 45여일 일간 지속된 10·26 계엄이 마지막이었으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0번째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아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이 같은 작금의 현실을 지성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1천88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도랑밭호(跳梁跋扈)'를 압도적으로 밀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뜻이다.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글썽, 이렇게 압축적이고 정확한 단어가 또 있나 싶다.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물이 나게 보았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위정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권력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을 지배하는 형국, 즉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 사회상황을 극명하게 표현한 사자성어 '도랑밭호(跳梁跋扈)'에는 많은 게 함의돼 있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서부터 친인척 보호, 정부·기관장의 권력 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의 몰이해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역술인 등에 의한 나라분열이 그것이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에 회망을 준 건 다음 아닌 시민들이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K-가요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줬다.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에는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500만 원어치의 커피를 선

결제해 줬다는 등,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 사례가 소셜미디어에 줄줄이 올라왔다. 이념과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계엄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호위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독을 무너뜨린 것도 역시 시민들의 힘이었다. 특히 '탈정치 세대'로 불렸던 청년 세대의 건강한 민주 의식도 빛났다. 과거와는 달리 을 집회는 2000세대의 여성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K-팝을 부르며 집회 문화를 바꿨고, K-민주주의라는 또 하나의 K컬처를 탄생시켰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목격하고, 양극화와 능력주의에 고통받는 그들의 누적된 분노와 실망이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런데 전혀 아쉽지 않다. 혼란의 시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릴 뿐이다. 지을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곧 2024년이다. 그러나 2024년을 접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순간에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며 광장에 나선 수백만 시민의 상가면 얼굴들, 그리고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이다.

자치칼럼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산실



김 용 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최근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중 가장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국민의 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뛰어난 회복탄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 회복탄력성은 민주주의를 피와 함성으로 지켜낸 전력과, 어려웠던 국가 경제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국민적 열정으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깊은 연관이 있다. 먼저,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주민자치의 주권자는 바로 주민이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책과 운영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선거이다. 선거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평등과 참여 보장이

핵심이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단체장을 주민이 참여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주민자치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핵심적인 리더를 뽑는 과정을 거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이나 선택을 따르는 방법이다. 주민자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안건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된다. 네 번째는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개인과 기관, 정부까지도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며,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의 법의 지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자치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는 그 맥을 함께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대하며,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할 기구가 주민자치회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

한하여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업무의 기능,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읍면동 위탁처리업무,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사무 협의, 지역회의 기능, 문화·복지시설 확충 시 의견제시 등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3,555개 읍면동에서 1,316개 읍면동 37%만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0개 동, 대구광역시 6개 동, 울산광역시 15개 동만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 214개 동, 인천광역시 142개 동, 광주광역시 49개 동, 대전광역시 53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산, 대구, 울산지역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보, 중도, 보수 등 정치적인 분류를 떠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며,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과 조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켜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현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의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이 주민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독자투고

국민을 울리는 보이스포싱의 눈속임



"대검찰청 검사입니다" 등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포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고전적인 방법에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포싱 피해는 지역,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 현금 인출, 금융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으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금전 요구 또한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112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만약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포싱 피해가 접수될 때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이 예방과 홍보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보이스포싱 범죄자들은 유창한 말솜씨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심리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피해를 유발한다. 아무리 많은 홍보와 예방책이 마련되더라도, 상대의 고의적인 접근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현재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보이스포싱 수법은 이를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순간의 방심을 경계하며 냉정한 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이스포싱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범죄이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전화끊고-확인하기'라는 3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김정원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12·3계엄 군 무장 '제2의 광주' 우려할 수준이었다니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은 주말 오후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눈이 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1천500여명의 군 병력이 투입됐으며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을 휴대했다. 현재까지 불출된 실탄도 1만발 이상으로 확인됐다. 상상 이상의 중무장 수준이 총격을 던지고 있다. '제2의 5·18'을 기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5·18 단체는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며, 모든 음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광주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오월영령을 모욕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작년 5월, 올해 5월,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진정성이 없

는 위선적 행동이었으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반인륜적 범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 결과도 현재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돼야 하며 파면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국방부는 계엄 투입 부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특전사 1·3·9공수여단(병력 각 400명, 271명, 222명)과 방첩사(200명)는 아직 무장과 실탄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 아울러 병력 중에는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까지 포함됐다. 계엄령 사태 보름을 지나 사건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국회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5·18항쟁처럼 끔찍한 학살 만행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10% 특별할인 광주상생카드 민생 경제 도움될 것

광주시가 '12·3계엄·탄핵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연거푸 긴급 처방을 내놓고 있다. 공공배달앱 연발 프로모션에 이어 추진하는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이 그것으로, 5개 자치구와 함께 설 명절이 있는 1월 한달간 기존 7%에서 10%로 늘렸다. 카드 발행 규모를 총 1천억원 정도로 예상하는 만큼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위메프오'와 '뽕겨요'를 통해선 이달말까지 주말에만 발행하던 2-3천원의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했고, 특히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최대 4천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특히 송년 특수가 사라지면서 새해 들어서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례없이 추운 겨울을 맞았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손잡은 것이다. 정부도 내년 예산에서 75%에 이르는 43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을 건의한 바 있다. 상생카드는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1인당 선불·체크카드 통합 50만원 내에서 10% 할인되는 만큼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 단체 회식, 명절 장보기 장려 등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사 위기의 경제 현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주요 상가에도, 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다. 코로나19대유행 시기도 넘겼지만 그때보다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계엄 쇼크까지 겹쳤다. 고물가와 교환율 등의 여파로 소비와 생산,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 것이다. 광주상생카드가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침물어는 詩

내게로 오는 길

이혜선

이삿짐 정리하는 책장에서 만난 그 대, 까만 점하나 확대경을 들이대고 어디서 온 뉘신지 물어본다

렌즈 거꾸로 내 몸 들이대고 그대 어디서 아직도 오고만 있는지 물어본다



밤길 가다가 만난 먼 하늘 불빛 하나 망원경 들고 서서 어디서 내게로 오시는 뉘신지 물어본다

어느 별 어떤 블랙홀에서 나를 바라보고만 있는지, 그대 내게로 오는 길을 잃고 역겹을 찰나로 불타고만 있는지 (시집 '바위를 풀고 자란 나무는 흔 침침한 눈에 불 밝혀주는 다초점 들러서 좋았다', 문예비디, 2024)

[시의 눈]

어디서 오는 뉘신지를 묻는 확대경에도 망원경에도 난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한 노릇이군요. 내게로 오는 길은 요즘 정국처럼 정면으로 면벽되듯 어둡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만 눈발은 함께 뒀던 복실이 기억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참 막다른 숲속이군요. 칠흙밤길에 만난 불빛이 또 뉘신지 묻습니다. 어떤 데서든 난 읽고 쓰며, 까만 구두점을 회색 물음표로 바꾸려 합니다. 오는 길을 묻는 자가 깊은 설원에 묻힐 때까지 난 알은체 않고 지나칩니다. 그래, 눈에 덮인 그가 날 끝까지 발굴해 낼 수 없도록 말이지요. 이혜선 시인은 경부 함안에서 나 동국대 국문과와 세종대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시문학'으로 문단했습니다. 시집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1996), '출렁 숲이 반이다'(2019) 등을 냈습니다. 그는 내면 사랑과 그리움을 끌어와 심안에 젖어드는 법문같은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